

檢, 서울대에 조국 ‘감찰무마’ 기소 통보

서울대 “새로운 내용 추가했다면 논의의 대상 될 것”

직위해제 결정되면 징계절차 돌입...수위 결정 오래 걸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무마’에 관련한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징계작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앞서 검찰이 통보한 내용에 새로운 것이 추가됐다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일가 관련 비위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는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16일 받았다.

사립학교법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검

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 해임,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절차가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여부와 수위가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장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교수조합은 이날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대학의 교육활동과 교학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대학본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협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들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율적인 학사운영의 중요성과 함께 외부단체의 과도한 방음에 대한 간접적 우려를 표명했다.

교협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안의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상되면서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 실시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교수들 상당수가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로서 위상을 고려한 윤리적 측면도 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앞두고 가래떡 뽑는 분주한 손길. 설 연휴를 앞둔 21일 오전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 떡집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가래떡을 뽑고 있다.

“씨XX, 공천받을 줄 알아?” 총선 예비후보 측근 지방의원에 ‘폭언’

동남을 예비후보 실제 욕설과 폭언... “술 마셔서 잘 모르겠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광주 한 예비후보 선거캠프 담당자가 지방의원들에게 폭언을 쏟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A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동구 한 한식당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동구와 남구, 비례의원 등 시의원 4명, 동구

의원 5명, 남구의원 2명, 캠프 관계자 등 모두 20명 정도가 참석했다.

시·구의원들은 A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이다 보니 선거캠프에 참여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A 예비후보의 핵심 측근인 B씨가 구의원과 시의원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쏟아내면서 불거졌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참석자는 “B씨가 시의원과 구의원

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군기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B씨가 지방의원들에게 ‘XXX야, 이래 놓고 니들이 공천받을 줄 아느냐’,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장은 없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폭언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A 예비후보는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혔으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경쟁 후보에 밀리거나 박빙으로 나타났다.

B씨는 광주 동구에서 사업을 하며 유력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실권을 휘둘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동구에서는 B씨에게 찍히면 다음 선거는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B씨가 밀고 있는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안좋자 시·구의원들이 문자 한번 돌리지 않았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B씨는 뉴스 1과 통화에서 “술 마셔서 잘 모르겠다.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신 ●

전·후진 기어 착각해 앞뒤 차 광광...6중 추돌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자동차 기어 조작을 잘못해 자신의 앞뒤 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6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5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오거리에서 후진과 전진 기어를 착각해 뒤차를 충격한 후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6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주행을 위해 기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후진 기어를 넣어 뒤차를 충격했다.

순간 당황한 A씨는 잇따라 전진 기어를 넣고 액셀 페달을 밟아 앞에 정차한 쏘나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 이후에도 A씨가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바람에 앞으로 떠밀려가던 쏘나타는 오거리 중앙을 지나서 차 2대와 옆 차선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후야야 멈춰설 수 있었다.

버스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버스 운전기사 B씨(56) 등 7명이 부상을 입었다.

CCTV 분석 결과 정차한 A씨의 차량이 기기 조작 미숙으로 앞뒤 차를 들이받고 쏘나타를 충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처치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갑자기 기스 통증이 발생해 당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기기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돈 값아라” 독촉에 흥기 휘두른 베트남인 검거

‘돈을 값아라’고 독촉을 하던 동료를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외국인이 5일 만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26)를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술집 앞에서 흥기로 같은 국적 B씨(22)를 찌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B씨는 엉덩이에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겠다’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지고 있던 흥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함께 지내던 집 보증금 50만원을 A씨가 나눠내지 않는 문제로 다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휴대전화 유심 칩을 버리고 전남 순천으로 달아났다. 대구, 경북 칠곡 등지를 전전하다가 20일 오후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지난 2018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 신병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홀로 집에 있던 22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22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22개월 된 A군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매트리스와 침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밤 늦게 아이를 재워두고 다음 날 아침에 귀가해보니 A군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몸에서 신체적 확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 부모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법 위반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